이창용 "정치 안정화 시급… 崔 대행 지지, 경제적 메시지"

〈한국은행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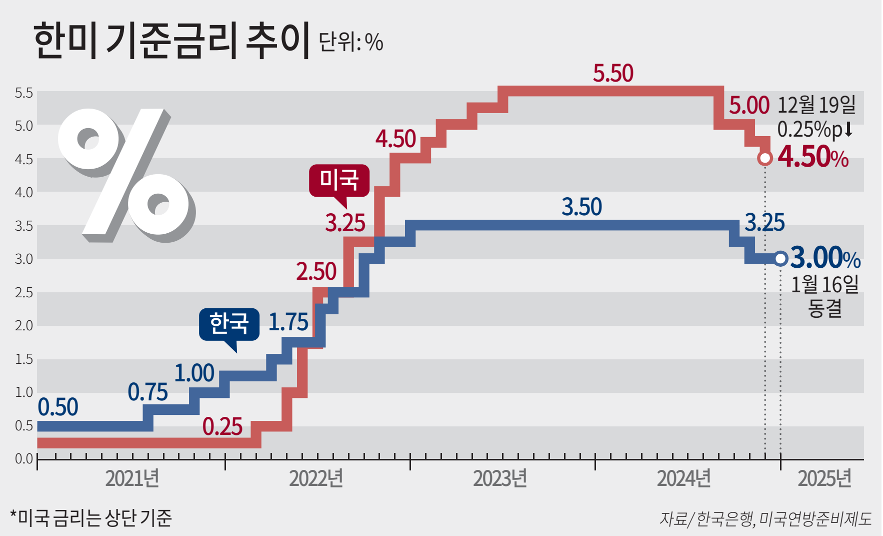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 총재,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 전망
"연이은 탄핵시 대외 신뢰도 영향 금리인하보다 정치불안 해소 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이어져 환율을 끌어 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커져 달러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회귀가 우려된다. 환율 움직임과 미국의 금리인하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한 번 쉬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발언을 두고 왜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보다 경제적인 메시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적 불안이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 총재는 "신용평가기관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몇 퍼센트 낮추는 것보다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보다 경제적인 메시지는 없고,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라고 했다.

◆ 내달 성장률 재조정 시사

이 총재는 비상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전에 환율이 1400원이었다면 지금은 1470원이고, 이 중 50원이 전 세계 공통적인 달러 강세 영향이라면 기계적으로 나머지 20원이 정치적 이유가 된다"며 "다만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이 나왔고 한은도 시장 안정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계엄과 정치적 이유로 30원 정도 올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환율은 정치 프로세스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고 조정해서 3, 4원 바꾸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슈가 터져 20원, 30원 팍팍 튀면 (정책 대응) 하는 사람도 힘 빠진다. 정치 프로세스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의 기저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번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바뀔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성장률 발표 시 재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상황 고려하여 인하 시기 조정"

이날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을 두고 경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금융통화위원들도 3개월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을 통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금리인하 사이클에 들어선 만큼 경기를 보면서 (금리인하의) 조정 시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소비·투자)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한은은 5억원을 은행에 연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은행은 지원 금리와 지원 비율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특별지원을 한 데 이어 한도를 14조원까지 늘린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는 워낙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조심스럽게 조정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환율 등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한은이 경기를 무시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복현 "가산금리 추이 면밀히 점검…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사 대출운용계획 종합 점검
"지방경기 활성화 등 필요 자금 공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금리인하 기대와 요구가 높음에도 미국의 관세강화·재정적자·통화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인하시기가 지연됐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 높은 이자율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한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 원장은는 연초 수립된 금융사들의 대출운용계획을 종합 점검해 금융권의 자금이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와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히 챙겨 민생안정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환율변동과 관련해서는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자금 공급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은행 단기 외화차입 비중은 19.7%로, 2008년 금융위기(73%)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금감원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묶여있는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풀릴 수 있도록, 부실 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사에 대해선 추가 충당금 적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실채권 경·공매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각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재명, 5대 은행장 만난다… 상생금융안 이목집중

이 대표측 현장간담회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탄핵 국면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표가 은행장을 만나면서 은행권의 추가 상생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자리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이 금융권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선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은행장들을 만나면서 금융권에선 더 많은 상생 방안을 이 대표가 요구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평소에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해오던 이 대표가 최근 경기침체에도 이자 장사로 좋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임금 인상 폭을 높이며 '돈 잔치'를 벌이고있다는 보도가 있따르자, 제1야당인 이 대표가 적극적인 상생금융안을 은행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서울 집값 3주연속 보합

매매수급지수 13주 연속 하락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3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는 13주 연속 하락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넷째 주(0.01%)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12월 마지막 주 꺾인 후 3주 연속 보합세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중랑구(-0.02%→-0.04%)가 면목·신내동, 도봉구(-0.02%→-0.04%)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용산구(0.04%→0.04%)는 산천·이촌동, 중구(0.01%→0.02%)는 신당동 주요단지, 광진구(0.03%→0.02%)는 광장·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구로구(-0.02%→-0.04%)는 구로·개봉동, 동작구(-0.01%→-0.0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서초구(0.03%→0.02%)는 잠원·반포동, 송파구(0.03%→0.04%)는 송파·잠실동 중소형 규모, 강서구(0.01%→0.01%)는 염창·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지만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다"며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단지별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나타나며 서울 전체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jw13@